한국철도공사 안산선 철도 시설 유지보수 업무 민간위탁(도급화) 철회 건의문

(전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0

발의연월일 : 2012. 3. 8 .

발 의 자 : 김동규, 김영철, 김정택, 김철진, 나정숙, 박영근, 박은경, 성준모, 송두영, 신성철, 윤태천, 이민근, 이형근, 전준호, 정승현, 정진교, 한갑수, 함영미, 황효진(19인)

1. 제안이유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고객의 만족과 기쁨에서 그 존재의미를 찾는 '고객이 만족하는 철도', 국민이 사랑하는 철도'를 만들겠다는 한국철도공사가 공기업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철도선진화사업 계획에 의해 안산, 고양, 진영, 안동 지역의 철도 선로유지보수 업무의 민간위탁, 즉 도급화를 시행하고자 지난 2012년 1월 6일 수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3월 중 업무개시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철도공사의 철도 업무 민간위탁 시행은 철도의 주인이자 고객인 국민과 이용시민과의 소통도 하지 않고 진행되어 왔으며 철도공사 내부의 노사간에도 충분한 협의와 합의조차도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철도 업무는 안전성과 공공성을 우선의 가치로 하여 추진되어야 함에도 경영의 효율과 비용 절감의 효과만을 주장하며 인원을 감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안정적인 인력이 투입되어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해야 함에도 비정규직이 종사하는 민간업체에 시민의 발을 자처하는 철도의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도급화 한다는 것은 국민과 우리 안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기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민간위탁(도급화)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2-03-16 10:55

2. 주 문

0 철도산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에서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관련법마저 지키지 않고 공사의 책임업무를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또한 관련법에 근거하여 철도산업의 안전장치가 풀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철도공사의 무책임한도급화 추진을 방치하고 있음에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안산시의회는 안전창치가 풀린 철도를 정상화하고 77만 안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철도공사와 철도 업무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포기한 국토해양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한국철도공사는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고객만족의 국민철도를 만들겠다는 스스로의 경영목표를 부정하며 안산시민의 민의를 수렴함이 없이 철도시설유지 보수 업무를 일방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업무행태에 대해 77만 안산시민의 이름으로 엄중 규탄한다.

- 한국철도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산선을 비롯한 철도의 선로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도급화)을 철회하고 이미 추진된 선로보수유지업무 등 안전관리업무를 공사의 직접관리 업무로 즉각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

- 국토해양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산업기본법 제38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철도의 고객이자 소비자인 국민의 이해와 동의없이 진행하고 있는 일방적인 민간위탁(도급화)을 시급히 중단시키고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해 온 철도공사의 경영행태를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2-03-16 10:55

-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날로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을 통한 불안한 안전관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철도시설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할 것이며 철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보다 선진적이고 일원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것을 촉구한다.

3. 참고 사항

- 철도 인력 운영 현황(2011. 12. 31현재)
  . 공사전체 정원 27,456명/현원 29,479명(초과 2,023명)
  . 시설분야 정원 4,396명/현원 4,283명(부족 113명)
  . 철도선진화 이유로 인력효율화 목표달성 위해 정원 5,115명 감축,
  . 시설분야 2012년까지 734명 감축 목표

- 철도 시설유지보수 업무 민간위탁 추진 현황
  . 2004년 고속철도 선로유지보수작업 도급화 : 162명
  . 2011년 일반철도 선로유지보수작업 도급화 : 35명
  . 2011년 일반철도 선로유지보수작업 도급화 : 81명
  (전라선 구례, 일산, 안산, 진영, 안동)
  . 2012년 도급화 예정 : 168명

- 철도 민영화 및 안전 사고 사례
  . **영국 철도 민간 매각과 대형 참사**
  1996년 철도 민간 매각
  1999년 10월 열차 탈선사고로 31명 사망
  2000년 10월 열차 전복으로 4명 사망, 선로 균열 보수 지연이 원인
  2001년 선로보수비용 증대와 승객감소, 희생자 보상금 등으로 경영 악화, 파산
  2002년 10월 공영체제로 전환

  . **한국철도 민간위탁 및 사고사례**
  2007년 6월 경의선 가좌역 정처장 신축공사 지반 침하 사고, 사고 직전 300여명의 승객태운 무궁화호 운행,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함. 사고 10일 전 이상 감지하고도 철도시설공단에 공문만 보내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2011년 12월 인천공항철도 계양역 유지보수 외주업체 노동자 5명 사망, 민간위탁업체 정규직 44명 뿐, 비정규직 1,171명**(* 2012년 안산선 민간위탁 업체임)**

4. 건의문 : 별첨

「건 의 문」

○ 한국철도공사와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산선을 비롯한 철도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민간위탁(도급화)을 즉각 철회하라.

○ 한국철도공사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선진화 계획에 의거 안산선(금정역~오이도역 구간)을 비롯한 철도의 안전과 직결되는 선로유지보수 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2012년1월 6일 민간 업체와계약을 완료하였고, 2012년 3월 5일부터 업무착수를 하기로 협의되어 절차상의 민간위탁은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우리 안산시민과 어떠한 협의도, 공감대 형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왔으며 철도공사 내부의 노사간 합의도 없이 철도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다.

○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선로유지보수와 같은 철도 안전과 직결된 업무의 일방적인 민간위탁 추진과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에 대하여 77만 안산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안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2-03-16 10:55

○ 2007년 경의선 가좌역 지반침하 사고와 2011년 계속된 KTX 사건사고 등을 통해서 국민들은 철도 안전에 대한 불신을 넘어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12월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국제공항철도 선로 보수 노동자 참사는 한국철도공사의 무책임한 안전관리 민간위탁 이 불러온 인재인 것이다.

○ 이러한 일련의 사고 속에서 우리 안산시민들은 안산선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일방적인 민간위탁에 동의할 수 없다. 안산선은 일평균 11만 안산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도권 통근형 생계철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인명 중심의 책임 경영보다 수익 추구의 경영을 우선하며 안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산시민과 한 마디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철도 참사가 보여주듯이 한국철도공사의 안전관리업무(선로유지보수 등) 민간위탁은 철도의 안전장치를 공사 스스로 잠금 해제하는 것이다. 즉, 한국철도공사의 민간위탁 방침은 안전관리 운영체계를 민간과 공사로 이원화시키고, 소통체계 마저 단절시키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철도공사의 민간위탁이 각종 사고를 방조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 이와 같은 철도산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철도산업 발전기본법 제38조에서 '철도시설유지보수의 시행업무는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관련법마저 기망하며 공사의 책임업무를 민간업자에게 재위탁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또한 관련법을 통해 철도산업의 안전장치가 풀리지 않도록 철도공사를 관리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사의 불법적 행위를 방치하고 있음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또한, 2004년 한국철도공사의 적정인력 산출에 관한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선로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적정한 현장인력을 선로 10킬로미터당 3.56명으로 기준을 산정하였다. 해당 기준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안산선에 대한 적정 인력을 산출한 결과, 안산선은 현원보다 16명을 한국철도공사가 더 충원해야 한다. 즉, 현재 인력 수준은 필요 정원의 절반에 불과하여, 안전관리를 수행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는 안산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철도가 비슷한 처지이기에 안산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은 철도의 안전성에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이에 안산시의회는 안전장치가 풀린 철도를 정상화하고 77만 안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을 위해서 공공성을 기망하는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의 관리 감독을 포기한 국토해양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첫째 안산시와 협의 없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민간위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국철도공사는 즉각 77만 시민에게 사과하고 보다 더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만족, 국민 만족의 철도 경영의 약속을 더욱 철저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 둘째 한국철도공사는 안산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간위탁을 즉각 철회하고, 이미 추진된 선로유지보수 등의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을 철도공사 직접관리로 즉각 환원해야 한다.

○ 셋째 국토해양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를 기망하는 한국철도공사의 불법 민간위탁을 즉각 중단시키고,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을 훼손한 한국철도공사의 불법적 민간위탁행위를 엄중 문책하고 철도 경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 넷째 한국철도공사와 국토해양부는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주업체의 비정규직을 통한 허술한 안전관리와 선로 유지보수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철도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하고, 철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한 선진적이고도 일원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 끝으로 77만 안산시민을 대변하는 안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철도의 고객인 안산시민과 더불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함께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고 해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2년 3월 9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2-03-16 10:55